

의안번호	2212965
의 퇴 인	김병기의원
회 답 일	2025.9.18.
추계번호	25D507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9억 1,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502억 2,000만원(연평균 100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	9,266	9,074	9,296	9,526	9,761	46,922	9,384
통계청, 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승격	11	11	11	11	12	55	1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	480	471	483	494	507	2,434	48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163	156	160	163	166	808	162
합계	9,919	9,712	9,949	10,194	10,445	50,220	10,044

주: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여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함(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폐지)	의무규정
2	안 제23조 (기획예산처) 및 안 제30조 (재정경제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보함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의무규정

1) 본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은 각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안 제27조 (국가데이터처)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4	안 제28조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5	안 제29조 (행정각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을 신설함	의무규정
6	안 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가함	의무규정
7	안 제41조 (산업통상부) 및 안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산업통상부는 차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관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8	안 제44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함	의무규정
9	안 제45조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소관사무 중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을 ‘성평등정책의 기획·종합’으로 변경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 (부총리)	—	미대상: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폐지하여 현 2부총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안 제23조 (기획예산처) 및 안 제30조(재정경제부)	○	
3	안 제27조 (국가데이터처)	○	
4	안 제28조 (지식재산처)	○	
5	안 제29조 (행정각부)	○	
6	안 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가하여 조직 신설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실 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인공지능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동 조직의 확대개편이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조직 및 사업의 확대 규모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41조 (산업통상부) 및 안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	미대상: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과 관련 예산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승계된다고 가정하고 추계대상에서 제외
8	안 제44조 (고용노동부)	○	
9	안 제45조 (성평등가족부)	×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있어 여성정책국의 확대 개편이 예상됨. 다만 현 시점에서 조직 및 사업의 확대 규모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현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제의 정부조직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편 내용을 재정수반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하며,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함
 - 또한,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며, 고용노동부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신설함
- [참고자료 1] 개편 후 정부 기구도
- [참고자료 2] 정부조직개편 개관
- 개정안에 따라 각 부처의 소관 사무가 이관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관련 사업비가 이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정책 사무 신설 등에 따라 조직규모 및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부·처·청 신설 및 폐지, 각 부처의 소관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사무실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 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임차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무실 배치안, 재배치 방법·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행정지원조직 인건비 등,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 기관장의 위상 변경에 따른 보수 상승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에 따른 비용 등을 추계함

- 각 부처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제를 마련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부처의 정원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장관급 기관 2개로 개편함에 따라 증원이 필요한 행정지원조직 인력 규모는 유사한 인력규모를 가진 기관 및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70명으로 가정²⁾
 - － 기획예산처 사업부서 인원과 유사한 규모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의 행정지원조직 비율 평균인 22%를 적용
 - － 증원되는 행정지원조직 70명은 현 기획재정부의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추어 배분
- 신설되는 장관실 및 차관실의 정원은 타 부처 사례를 참고하여 장관실 7명(고위 1명, 4급 2명, 7급 2명, 9급 2명), 차관실 3명(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가정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
- 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하는 안 제23조 및 안 제30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 외의 주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개편

-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및 차관, 비서실 증원인력과 행정지원조직인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른 장관 및 차관의 연봉액과 2025년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산출

2) 장관급 부처의 행정지원조직은 일반적으로 100~150명 규모이며, 부처의 행정지원조직 인원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2023.10.) 참고
 3)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기획재정부 개편에 따른 보수 총액: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총액 (=직급별 1인당 보수×인원)	장관	1명	171	175	179	183	188	896
	차관	1명	163	167	171	175	179	854
	고위공무원	4명	584	598	612	627	642	3,064
	3급	2명	216	221	226	232	237	1,133
	4급	15명	1,585	1,623	1,662	1,702	1,743	8,316
	5급	32명	2,354	2,411	2,469	2,528	2,588	12,349
	6급	12명	699	716	733	751	769	3,668
	7급	7명	356	364	373	382	391	1,865
	8급	3명	148	152	156	159	163	778
	9급	5명	172	176	180	185	189	901
합계		82명	6,448	6,603	6,761	6,923	7,089	33,82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산출된 보수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획재정부 기본경비 비율 등을 반영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2억 6,600만원 등 5년간 469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기획재정부 개편: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6,448	6,603	6,761	6,923	7,089	33,824
기관부담금	842	867	892	920	949	4,470
기본경비	1,567	1,604	1,643	1,682	1,723	8,219
자산취득비	408	—	—	—	—	408
합계	9,266	9,074	9,296	9,526	9,761	46,92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통계청과 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의 승격

- 개정안에 따라 통계청과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는 경우 기관장 인건비 상승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앞선 전제에 따라 현 통계청 및 특허청 직원이 그대로 이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 증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장과 청장의 보수의 차액은 다음과 같음

[표 4] 처장 및 청장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처장(A)	147,532	15,960	13,800	1,680	480	163,492
청장(B)	145,378	13,560	11,400	1,680	480	158,938
보수 상승분(A-B)	2,154	2,400	2,400	0	0	4,554

주: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해당 보수 상승분에 연도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55만원 등 5년간 총 5,539만원으로 추계됨

[표 5] 통계청 및 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의 승격: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9,327	9,550	9,780	10,014	10,255	48,926
기관부담금	1,219	1,254	1,290	1,331	1,372	6,465
합계	10,545	10,804	11,070	11,345	11,627	55,391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

- 신설되는 차관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2025년 차관의 연봉액 1억 4,538만원으로 하고, 비서실 직원 3명의 보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동일 직급의 연봉액을 준용한 후 직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을 반영

[표 6] 증원인원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차관	145,378	13,560	11,400	1,680	480	158,938
5급	78,842	5,160	3,000	1,680	480	84,002
7급	47,572	4,320	2,160	1,680	480	51,892
9급	35,066	4,260	2,100	1,680	480	39,326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출된 보수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중소벤처기업부 기본경비 비율 등을 반영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8,000만원 등 5년간 24억 3,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342	350	359	367	376	1,795
기관부담금	45	46	48	49	50	237
기본경비	73	75	76	78	80	382
자산취득비	20	-	-	-	-	20
합계	480	471	483	494	507	2,43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 현재 고위공무원 가등급인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에 따라 보수상승분을 추계하고 차관급 격상에 따라 증원되는 비서실 직원은 2명(5급, 9급 각 1명)으로 가정함

[표 8] 증원인원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본부장	차관급(A)	147,532	15,960	13,800	1,680	480	163,492
	고위(B)	141,884	11,160	9,000	1,680	480	153,044
	차액(A-B)	5,648	4,800	4,800	-	-	10,448
5급		76,062	5,160	3,000	1,680	480	81,222
9급		26,598	4,260	2,100	1,680	480	30,858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출된 보수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고용노동부 기본경비 비율 등을 반영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6,300만원 등 5년간 8억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격상: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125	127	130	132	135	648
기관부담금	16	17	17	18	18	86
기본경비	12	13	13	13	13	64
자산취득비	10	-	-	-	-	10
합계	163	156	160	163	166	80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9억 1,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02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	9,266	9,074	9,296	9,526	9,761	46,922
통계청, 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승격	11	11	11	11	12	55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	480	471	483	494	507	2,43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163	156	160	163	166	808
합계	9,919	9,712	9,949	10,194	10,445	50,220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조직 개편 사항을 타 부처 규모, 유사 사례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개정안 시행 시에는 공무원 총 정원, 부처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규모를 결정하게 되므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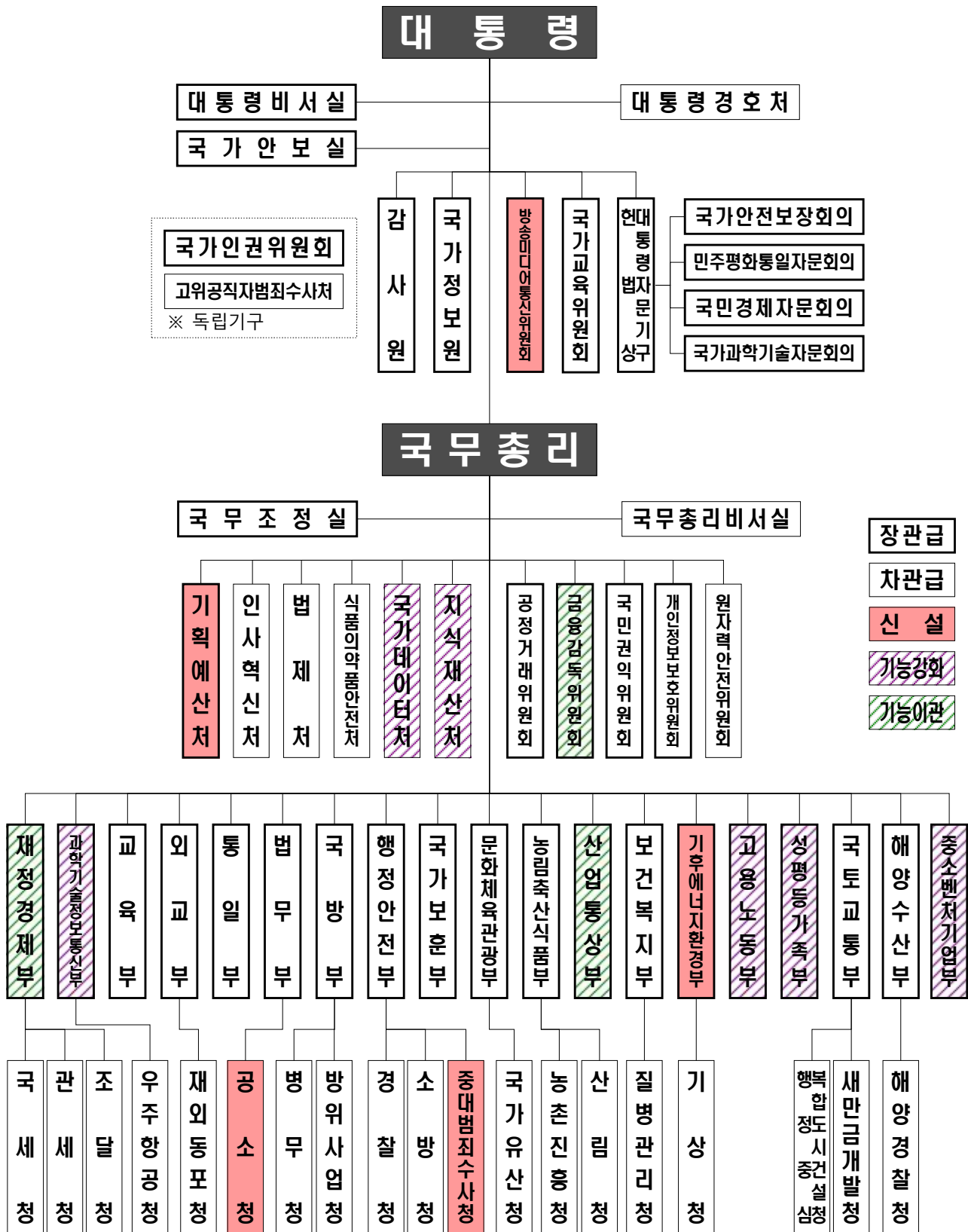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1] 개편 후 정부 기구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중앙행정기관)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 ⇒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3처△1청)



[참고자료2] 정부조직개편 개관(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신설 기능강화 기능이관

